

January 21,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18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20. 1. 9. ~ 1. 16.)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2020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키워드 발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키워드로 ① 전방위적인 투자촉진 및 내수진작(민간 민자 공공3대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추진 등), ② DNA(Data/Network/AI)+BIG3 신산업 투자 확대, ③ 5대 구조혁신(노동, 정부, 공공, 재정, 인구) 등을 선정함

[\[참고자료\]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보도자료\(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참고자료\] 부임1 20년 재정조기집행 계획](#)



[\[참고자료\] 부임2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



[기재부 등]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선정

2020. 1. 15. 관계부처 합동으로 5대 추진전략 및 10대 핵심과제 발표. 5대 추진전략 분야로는 R&D혁신, 전문 인력 중점 육성, 규제 선진화,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이 선정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K-뷰티 혁신,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등이 10대 핵심과제로 선정되었음.

[\[참고자료\]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보도자료](#)



[\[참고자료\] 부임1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참고자료\] 부임2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참고자료\] 부임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산자부]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2020. 1. 15.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 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유모차, 전기오븐기, 구명복 등 총 50개를 20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 ②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을 분리하여 안전성조사를 연 중 5회 수시 조사, ③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④ 온라인상에서 위해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 도입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품시장관리과 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공정위1] 「하도급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 예정

2020. 1. 10.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지침’이 시행됨. 주요 개정 내용으로 ①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 관련 정보 요구 금지, ②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 변경, ③ 기술자료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 요건’완화 등이 있는데, 관련하여 ‘기술자료 요구서’가 위 지침에 따라 교부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

[\[참고자료\]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참고자료\] 별첨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신규조문대비표](#)



[공정위2] 복합쇼핑몰, 아울렛 및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2020. 1. 14.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복합쇼핑몰, 아울렛 및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및 배포함. 주요 내용으로 ① 광고비 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 ② 계약 갱신시 통보기한 설정, ③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화, ④ 판촉행사와 판촉사원 사용시 비용 부담 주체 명시 등이 있음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위 표준계약서를 채택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참고자료\]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참고자료\] 별첨1_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대형쇼핑몰, 아울렛\) 전문](#)



[\[참고자료\] 별첨2_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전문](#)



[\[참고자료\] 별첨3_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전문](#)



[국토부1]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사업 추진 확정

2020. 1. 15. 광역교통 2030 첫 사업으로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됨. 해당 구간은 약 9.7km(4개의 정거장)이며, 총 사업비는 8,881억원 규모로서(2018년 기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착수 예정

[\[참고자료\] 광역교통 2030 첫 사업으로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예타 통과](#)



[국토부2]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발표

2020. 1. 15.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개정 내용으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시설물과 시행 가능 사업 확대, ② 토지소유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수요청에 대한 판정 기준 완화, ③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절차 기준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되고 매수청구도 쉬워진다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 위한 115억원 지원

2020. 1. 15.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총 114억 9,600만 원 규모(작년 대비 138% 증가)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함.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 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됨. ‘개발촉진 부문’은 112억원 규모로, 35개 기업에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투자유치 부문’은 3억원 규모로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참고자료] 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총 115억 원 규모



[문체부] 2020년 스포츠산업 금융(펀드, 융자) 지원 계획 발표

’20년 펀드 296억원 추가 조성 및 출자 운용조건 개선, 융자 660억원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함. 구체적으로는 정부출자비율 상향 조정(65% → 70%), 기준수익률 하향조정(3% → 2%), 상반기 융자규모 460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융자지원신청: 1. 22. - 2. 12.)

[참고자료] 2020년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개선 확대



[과기부]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발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2020. 1. 9.)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등으로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개방 유통 확대, ②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 가공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③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하위법령, 유관 법령 정비, ④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 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호, 제15조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국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인데다가 그 규제마저 형식적으로 설계 운영되는 등에 따라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조차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빅데이터 분석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호, 16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 그러나 현행법은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 삭제 등, 안 제65조 제1항)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 02-316-1777

✉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